



• 너도 나도 한번은 봐야 할 교육지 •

김용균 5주기에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김용균 노동자 5주기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죽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자 교육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순서

2023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1
'이윤보다 생명'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3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싸워야 합니다.	4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법 시행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6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7

01 /

2023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시민들은 '나라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각자도 생하라고 노동자와 시민을 떠밀고 있습니다.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에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킬러규제다.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킬러규제 15개 과제가 선정되고,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가 없어져서 노동자들의 쉼 권리가 사라지고, 국가마이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 기업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침해될 것입니다. 또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여 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서 시간의 권리를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주 69시간 일하도록 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이제는 일부 업종이나 일부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일부 업종만 시행한다고 해도 곧 다른 업종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불규칙하게 집중적으로 긴 시간 일을 하면 과로사의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가 결합되면 노동자들은 시간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기업이 원하는 때에 일을 하기 위해 늘 대기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김용균 노동자 5주기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면서 노동자와 생명을 위험에 처하도록 만드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투쟁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02/

'이윤보다 생명'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각자도생'을 명할 때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안전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권'은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위협에 대한 예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기업과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권이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시민이 생명과 안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시민에게는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시민이 정부의 캠페인에 동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안전 정책에 개입하고 바꿔낼 수 있도록 안전 정책에 대한 노동자·시민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사가 발생하면 인도적인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데 피해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애도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온전한 회복은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9월, 노동자와 시민 5만 명이 「생명안전기본법」 입법동의청원에 참여하였습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김용균 노동자 5주기는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상식이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03/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싸워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떨어져죽거나 끼어서 죽는 등 전근대적인 재해가 잦습니다. 기업이 안전에 비용을 더 들이고,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바꾼다면 죽지 않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관리자만 처벌되고, 산재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 현장을 바꿀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는 처벌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산재사망자 중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9명 줄었으나 여전히 많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도 솜방망이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수는 중대재해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 23건(23년 8월 기준)에 불과합니다(이 중 대기업 경영책임자 기소는 1건). 형량은 대체로 징역 1년~1년 6개월로 낮고,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 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던 법의 취지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의 약 80% 정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중대재해에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로 일관하고, 중소기업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힘들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고, 개악을 막기 위해 함께 싸웁시다.

04/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김용균법'이라고 불립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김용균의 죽음에 분노한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유족의 싸움이 산안법을 개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산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들(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는 현실을 부추하게라도 반영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 예방책임 의무를 강화하면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산안법에서 노동자 산재예방 책임을 강조할 경우 산업재해는 기업들의 말대로 "노동자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예방책임 의무 강화를 개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노동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인정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이 적용되었지만,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려면 노동자들이 직접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자들과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등에 대한 교섭 책임이 부과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실질 책임자와 교섭할 권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조법 개정안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05/

법 시행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짧게 잡아도 15년이 걸렸습니다. 법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을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정확하게 묻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필요해서였습니다. 1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의 힘으로 법을 세워내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 시설 등에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같은 시민재해가 발생했지만, 아직 누가 책임자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검찰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2022년에는 2,2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2023년 10월 말까지 7건 만이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1건의 경영책임자만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처벌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한 사업장에서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그 사업장의 누구도 기소되지도 않았고 처벌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아파트를 만든다던 'e편한세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고 법의 존재 이유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나서서 싸움을 시작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밝히고 처벌할 수 있도록 더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06/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흐름을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5주기를 맞이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집단적인 힘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함께 아파하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싸웠으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김용균 5주기를 맞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김용균 5주기 추모 기간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는 죽음을, 산재를, 재난을 막기 위해서, '김용균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 모두의 행동이 모이고 커지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 ✓ 내가 있는 공간, 작업장에서 산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내 사업장 위험 요소를 찾아봅시다.
- ✓ 12월 9일 오후 5시 서울 보신각에서 진행될 김용균 추모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 ✓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에 맞서는 여러 행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사회의 기본 가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김용균 5주기 추모기간 일정

11월 20일 11시	5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11월 24일 - 12월 03일	5주기 전시회 '유감 (regret)' 전시공간, 대안예술공간 이포 (영등포구 도림로126길 9) 11월 24일 14시, 전시회 오픈식
11월 28일 15시	기후위기와 불안정노동, 발전비정규직의 미래 토론회
12월 02일 16시	'산재한 산재, 産災' 이야기마당
12월 06일 12시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모제
12월 09일 11시	마석 모란공원 추모제
17시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서울 보신각)

* 추모기간에 지역별 추모제, 추모사업 진행

* '기계가 아니다' 다같이 챌린지

* 김용균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 운영

* 중대재해 사업주의 말말말 이야기마당(예정)